



2023. 8. 30. 시행

2024년 소방공무원시험 대비

월비스 진도별 모의고사

주관: 월비스 소방학원

8월 진도별 모의고사

【시험시간 10:00~11:15】

수험번호	
성명	

문제책형
(없음)

과목순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

《 시험관련 공지사항 》

- 해설지 수령 및 성적공개 일시
 - 해설지 수령: 수업중 해설강의 진행
- 공개 방법
 - 월비스 소방학원
- 이의제기 기간:
- 이의제기 방법
- 시험에 응시하기전 OMR카드의 수험번호, 성명, 직렬코드를 반드시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 배부받은 OMR에 직렬코드는 "01", 과목순서는 상단에 명시된 대로 순서대로 기입해 주십시오.
- 시험시간은 75분간입니다.

월/비/스/고/시/학/원

① 번개 ② 폭풍 ③ 쓰나미 ④ 토네이도

18. 재난관리의 단계별 주요 활동 중 '긴급통신수단 구축'이 해당되는 단계로 옳은 것은?

- ① 대응단계 ② 대비단계 ③ 예방단계 ④ 복구단계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 단계별 조치사항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방단계 -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② 대비단계 -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③ 대응단계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④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시행

20. 다음 중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긴급구조란 재난 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 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이다.
 ②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③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④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2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현장에서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의 긴급구조 현장 지휘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구조
 ㄴ.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ㄷ.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ㄹ. 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2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 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다.
 ②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상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안전 정책조정위원회는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전을 사전에 검토한다.
 ④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2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한 내용이다.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나)의 심의를 거쳐 (다)을/를 선포할 수 있다.

- | (가) | (나) | (다) |
|---------------|-----------|--------|
|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안전정책조정위원회 | 재난사태 |
| ② 행정안전부장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재난사태 |
| ③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특별재난지역 |
| ④ 행정안전부장관 | 안전정책조정위원회 | 특별재난지역 |

24. 재난관리 방식 중 분산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난의 종류에 따라 대응방식의 차이와 대응계획 및 책임기관이 각각 다르게 배정된다.
 ② 재난 시 유관기관 간의 중복적 대응이 있을 수 있다.
 ③ 재난의 발생 유형에 따라 소관부처별로 업무가 나뉜다.
 ④ 재난 시 유사한 자원동원 체계와 자원유형이 필요하다.

25. 다음 중 특별재난 선포자는?

- ① 소방청장 ② 국무총리 ③ 대통령 ④ 행정안전부장관

소 방 법 규

출제위원 : 오 도 희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월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응시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 시험 시간은 75분입니다.

1.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상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소방박물관을, 소방청장은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방박물관에 소방박물관장 1인과 부관장 1인을 두되, 소방박물관장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③ 소방박물관에는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④ 소방체험관은 국내·외의 소방의 역사, 소방공무원의 복장 및 소방장비 등의 발전 및 발전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관 및 전시한다.

2.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초 계획
㉡ 소방전문인력 양성
㉢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 소방기술의 연구 및 평가
㉤ 재난·재해 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업무에 필요한 대응 체계 마련
㉥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3.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상 소방력의 동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각 시·도지사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동원된 소방력을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에 지원·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이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소방활동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각 시·도지사에게 소방력 동원을 요청하는 경우 동원 요청 사실과 필요한 사항을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4.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과 전용구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자동차가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

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의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연면적·높이·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등이 해당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성능위주설계의 기본설계도서 등에 대해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청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④ 소방서장은 신기술·신공법 등 검토·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3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②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로서 연면적 600m²인 경우
③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300m²인 경우
④ 발전실로서 바닥면적이 500m²인 경우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은 제외한다.)에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②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③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④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사·건축사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 -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수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결송수관설비
- ②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 ③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축산·어류양식용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 자동화제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 ④ 원자력발전소,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1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상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방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실태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사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인 방식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 ④ 소방청장은 실태조사를 화재합동조사단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 화재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화재예방안전관리가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① ㉠, ㉡, ㉣
- ② ㉠, ㉣, ㉤
- ③ ㉠, ㉡, ㉣, ㉤
- ④ ㉡, ㉣, ㉤, ㉤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간당 열량이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 주위에 1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할 것
- ② 열을 발생시키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 ③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화재 등 긴급 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 ④ 노·화덕설비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쌓는 부분 바닥면적의 사이는 실내의 경우 1.2미터 또는 쌓는 높이의 1/2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두어야 하며, 실외의 경우 3미터 또는 쌓는 높이의 1/2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둘 것
- ②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이 대지경계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 최소 6미터 이상 간격을 둘 것. 다만, 쌓는 높이보다 0.9미터 이상 높은 내화구조 벽체를 설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 ③ 실내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면서 불연재료여야 하고, 다른 종류의 특수가연물과 같은 공간에 보관하지 않을 것. 다

만, 내화구조의 벽으로 분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④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높이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20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 300제곱미터) 이하로 쌓아야 한다.

1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로 옳은 것은?

- ① 공동주택 중 기숙사
- ② 의료시설
- ③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④ 30세대 이상인 아파트

1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벌칙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 ①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②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 ③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16.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상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17.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하도급계약금액이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 ② 발주자는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등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상 도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시설업이 영업정지된 경우
- ② 소방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
- ③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소방시설업을 휴업한 경우

19.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상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상속일,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 이내에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접수일부터 (㉡) 이내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지위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 ㉡ ㉢

- | | | |
|-------|----|----|
| ① 15일 | 3일 | 7일 |
| ② 15일 | 7일 | 3일 |
| ③ 30일 | 3일 | 7일 |
| ④ 30일 | 7일 | 3일 |

20.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상 제3류 위험물이 아닌 것은?

- ① 나트륨
- ② 금속의 인화물
- ③ 염소화규소화합물
- ④ 금속의 아지화합물

2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 완공검사의 신청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 ②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 ③ 이송취급소의 경우 :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 ④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시 설치 장소를 확보한 후

2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정밀정기검사 및 중감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밀정기검사의 경우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가?

- ① 13년
- ② 12년
- ③ 11년
- ④ 10년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상 시·도지사가 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 ②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일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 ③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 ④ 이중벽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2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 안전거리를 제외할 수 있는 제조소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매취급소
- ②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등
- ③ 이송취급소
- ④ 주유취급소

2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을 1,000m² 이하로 해야 하는 위험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류 위험물 중 질산염류
- ② 3류 위험물 중 황린
- ③ 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 ④ 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행 정 법

출제위원 : 신 기 훈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월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응시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 시험 시간은 75분입니다.

1. 「행정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에 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민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 따른다.
-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④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은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 ② 신뢰보호의 원칙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실권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이므로 권력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② 국가가 수익자인 수요기관을 위하여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요청조달계약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③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관계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
- ④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관하여 그 처분을 위임받아 매도하는 것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법령등에 규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 ② 「행정절차법」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에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 ③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5.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 ②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은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확인에 해당한다.
- ③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④ 인감증명행위는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는 인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므로 무효확인을 구할법률상 이익이 없다.

6.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 ②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당부를 심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 ③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으나,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하여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 ④ 구 「사해행위등규제법」에 의한 허가의 경우 허가신청이 적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재량행위라 할 수 있겠으나 허가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 ②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인 경우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 ③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에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 ④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8.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②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 ③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 ④ 불가쟁력이 발생한 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으면, 후행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

9.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② 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부관은 적법하지 않다.
- ③ 행정처분에 부과한 부담이 무효가 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의 이행으로 행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

화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담의 효력은 소멸하게 된다.

10. 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은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처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로 처분의 위법성을 알지 못하면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법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11.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②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③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있지 않는 한, 행정조직 내부적으로도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대외적으로도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④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제량권 행사의 준칙이 되는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고 행정의 자기구속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2. 행정상 사실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처분의 준비단계로서 행하여지거나 행정처분과 결합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흡수·통합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처분과 분리하여 따로 권력적 사실행위를 다룰 실익이 있다.
 ②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③ 도시사가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한 경우, 폐업결정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 정도·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형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 여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3.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도시계획법령에 따르면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공고 및 공람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②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 그 부실의 정도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더라도 그 부실로 인하여 행정계획은 위법하게 된다.

14. 행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③ 국가와 사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법령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5.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에도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과세처분에 대한 진심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의 계류 중에 세액산출 근거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 이로써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④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였다면,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에 불문한다.
 ③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며,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④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일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여야 한다.

17.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조례에 의하여 직접명령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자 제2차로 계고처분을 행한 경우, 제2차 계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대집행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계고처분은 독립한 처분으로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동시에 발령할 수 있다.

18.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이 다를 바가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후에 형사처벌을 할 경우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반한다.
 ②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된다.
 ③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되기 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19.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방기본법」상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은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②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지만, 새로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 ③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룰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조세 부과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다면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채납처분에 착수할 수 있다.

20.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이 성립한다.
- ③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된 행정처분이 객관적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경우, 당해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 ④ 공무원 개인이 지는 손해배상책임에서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21.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청의 제방부지에 대한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구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피해보상제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구 「전염병예방법」의 취지와 입법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실질은 피해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에 가까우므로 그 인정 여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타당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고, 보상방법을 유수지에 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등 공급시설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공공필요성의 요건이 충족된다.

22. 자신이 소유한 모텔에서 성인 乙과 청소년 丙을 투숙시켜이성 혼숙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되어 A도 관할 B군 군수 丁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본 사안은 이른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본 사안에서 丁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불복은 A도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 ③ 행정심판위원회가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한 경우, 甲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행정심판위원회가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한 경우, 丁이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3. 「행정소송법」에 따른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② 행정청이 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③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④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없다.

24.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서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③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④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회비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회비납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5.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 ②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한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에이르기까지 허용된다.
- ③ 처분등이 있는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한다.
- ④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 응시자 주의사항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와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2. 답안지 책형란의 책형 표기는 시험 시작 후 문제책 표지 상단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본 모의고사에서는 책형구분이 없음)
3. 선택과목 응시를 원하는 수험생은 진행요원에게 해당 시험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시험시작 즉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6.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 답안지 기재요령

1. 답안지의 정답란 표기는 매 문항마다 반드시 1개의 답항을 골라 표기하여야 합니다.
2. 답안지에는 아래와 같이 모든 문항에 대해 4개의 답항이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응시생들은 OMR답안지에 표기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 해당번호에 명확하게 표기하십시오

4. 답안지 작성요령

- 1) 성 명: 본인의 성명을 빈칸 없이 한글로 기재하고“●”로 표기하여야 함.(반드시 기재)
(예시 : ①번이 정답일 경우 → ● ② ③ ④)
(안 좋은 예 → ① ● ② ○ ③ ● ④ ✓ 인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2) 수험번호(7자리): 수험번호는“생년월일 6자리+남녀구분(1또는2)를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반드시 기재)

※ 정확하지 못한 표기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실제시험이라 생각하고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